

정부 “주52시간제 틀 유지”…일부 업종 완화

“지난 3월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해…결과 전폭 수용”

일부 업종·직종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불러온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에 앞서 개편 ‘방향’을 우선 설정한 것으로, 대상 업종과 직종 등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노사 및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검토 도입 이후 8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재검

토에 들어갔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가까이 는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등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등 업종별·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

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컨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월52시간(12시간×4.345주)이 돼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특정 업종과 직종으로 범위가 좁혀졌을 뿐 해당 업종과 직종에 대한 ‘주69시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

광주 북구 검도부 불투명 임용 파문

‘검도회 출신’ 운영위원 2명 아들이 선수 임용

잇단 성범죄 계기로 불거진 광주 북구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와 부실 운영 관련 의혹이 시 검도회 임원 자녀들의 불투명한 선수 임용 과정으로 번졌다.

특히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검도부 운영위원회(운영위에 부당 참여한 시 검도회 임원 2명의 자녀들이 전·현직 선수로 임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간 북구청 검도부 운영위원회 위원(총 7명) 중 1명 씩은 시 검도회 임원이 참여했다.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는 시 검도회 관계자(지역 검도인)를 뺀 체육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목 단체의 부당한 외압·개입에서 벗어나 검도부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에만 시 검

도회 임원 2명이 잇따라 운영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위원인 시 검도회 임원 2명은 선수 신규 임용·재임용 평가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 기간 중에는 위원으로 참여 중인 시 검도회 임원 2명의 아들이 각기 신규 임용됐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선수 임용 면접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친구 또는 지인이 공교롭게도 임용·재임용 평가에 참여했다.

특히 시 검도회 임원의 아들인 한 선수는 북구청 자체 감사를 통해 성범죄 연루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된 바 있다.

시 검도회 임원 출신 전임 운영위원이 참여한 면접을 거쳐 임용된 또 다른 현직 선수는 자기소개서에 소속 학교 등을 자세히 기재, 특유 조사 과정에서 못마를 맞기도 했다.

특유는 또 현재 북구청 검도부 감독이 수 년 간 지역 모 학교 운동부 코치로 활동, 제자들이 다수 선수로 임용된 점도 질타했다. /김도기 기자

與 ‘이동관 탄핵’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국회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 행위가 국회의원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한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을 접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는 등의 일체 의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 소추라는 것은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또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며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권 독립했더니 인사 정제’

전남도의회 파견교류 추진

전남도의회 가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 정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 내 제한된 전보로 인한 인사 정제가 나타나고 있어 전남도나 중앙부처 등과 인사교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류대상 직급은 4·5·6급으로 파견기관은 중앙부처, 광역의회, 전남도청 등이며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도의회는 자발적인 교류 파견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류 파견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근무성적 평정 시 ‘우’ 이상 등급 부여와 함께 인사상 가산점을 1년 0.6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성과상여금도 A등급 이상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교류 파견자의 승진 우대를 위해 당해 직급에서 파견 실적이 없는 경우 승진 후보 1배수 이내 정기인사에서 2회 승진을 제한한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4개 담당관, 8개 상임위원회로 조직이 구성됐으며, 일반직 행정공무원 99명이 근무 중이다.



해남군 도민과의 대화

13일 오후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2023 해남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영록 지사가 해남군 특산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부 예산 축소에 5·18 불뚝…트라우마센터·국제연구소 직격탄

정다운 광주시의원 “대통령 공약사업도 차질 불가피”

정부의 예산 축소가 5·18 사업으로 불뚝이 튀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인 국립 트라우마센터와 5·18 국제연구소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운(민주당·북구2) 의원은 13일 광주시 민주평화인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난관에 부딪힌 5·18 사업들을 언급한 뒤 “이대로라면 전면 축소해야 할 기로”라며 중앙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이 언급한 대표적 삭감 사례는 국립 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원 등 2가지로, 모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 당시 적정 규모 60명에 예산 61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13명, 16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트라우마센터 치유 대상자는 올해 1131명으로, 1년 안에 6300명, 3년 안에 1만9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난에 따른 심각한 운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18국제연구원도 당초에는 별도의 국립기관화가 기대됐으나 5·18기념재단 안에 고작 3명 규모로 구색만 갖춰 설치돼 대선 공약이 심각하게 축소됐다. 국제적 활동을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설상가상 내년 운영비마저 삭감돼 정상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18 왜곡·편향 인사가 정부 주요 기관에 채용되는 일이 거듭된 데 이어 주요 예산마저 삭감돼 안타깝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5·18기념식을 두 번 온 것만으로 5·18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며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꿈같은 일에 그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하고 광주를 우물쭈물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청소년 10명 중 절반, 전두환 손자 5·18 사과 “잘했다”

응답자 50.5% 긍정 평가…11%는 부정적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절반은 5·18 학살과 현장 질서 파괴 주변 전두환의 손자인 전우원의 5·18 사죄 행보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학술연구·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미만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5·18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5%가 전씨의 사죄를 긍정적(매우 긍정적 16.1%·긍정적 34.3%)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1.0%로(부정적 9.1%·매우 부정적

1.9%)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 지역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64.2%(긍정적 37.3%·매우 긍정적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54.9%(긍정적 42.7%·매우 긍정적 12.2%) 대전·세종·충청이 51.5%(긍정적 20.8%·매우 긍정적 30.7%), 광주·전라 49.7%(긍정적 39.1%·매우 긍정적 10.6%) 등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사과 이후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다른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죄 유도가 31.6% 응답률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18진상규명

(25.4%), 피해자의 명예회복(21.8%), 전두환 비자금 환수(15.4%)가 뒤를 이었다.

전씨의 사과 반응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5·18 청소년 인식지수는 지난해 대비 1.0점 오른 68.4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66.5점)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다.

이밖에 5·18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점수로는 79.6점이 매겨져 지난해 대비 1.3점 올랐다. 재단은 이를 통해 5·18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시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다.

“빅스포 지역대표 국제행사…정상 운영해야”

민주당 광주시의원들 “한전의 적극 참여·역할 강령 요청”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일명 빅스포·BXPO)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 최대 에너지박람회로 자리잡은 빅스포의 개최 여부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 개최를 위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빅스포는 한전이 2015년부터 주최하는 대표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에너지 혁신기업과 기술을 꾸준히 발굴해왔다”며 “그러나 올해 11월 BIXPO 2023이 한전 지원 중단으로 열리지 못했는데,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지만, ‘종로에서 빵 맛고 한강에 화풀이하는 격’이고, 내년 행사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빅스포는 지난해 1만 7000여 명이 참관하고 참여기업 233개사, 참여국가 60개국, 수출계 약 4500만 달러를 일궈내는 등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라며 “특히 빅스포는 한전의 지방이전 목적 중 하나인 지역발전 도모와도 맞닿아 있다”며 지속 개최를 촉구했다. /조일상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혐의, 대장동 사건과 별도 재판

李 “지금도 주 1회 재판…피고인 방어권 침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등 사건을 기존 대로 별도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대장동 등 재판에서 위증교사 병합 여부와 관련해 별도 공판 준비기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일에서 재판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과 위증교사 사건이 관련성이 적고 쟁점도 다른 만큼 기존과 같이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 대표 측은 위증 교사를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기록과 증인 등이 방대한 대장동·백현동 등 재판에 사건이 병합되면 결론이 지연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계속했다.

검찰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는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법원 재량으로 정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으로 주 1회 재판에 매달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까지 별도로 진행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북핵 위협 고조에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한미 양국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SCM)에서 맞춤형 전략억제(TDS) 개정안에 서명했다.

TDS는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통해 처음 만들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미 태세와 능력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핵·wmd 능력이 고도화되고, 사용 위협이 고조되면서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TDS 개정이 이뤄졌다.

TDS가 군사기밀을 다루고 있어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